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77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원	고	○○○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근직
피	고	○○○○○○○주식회사 경기 양평군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문윤식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가 2018. 5.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며 ○○○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5.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며 ○○○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양평군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6. 12.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주이고, 설립 당시 주주로는 ○○○(12,000주), ○○○(9,000주), ○○○(9,000주)이 있었으며, ○○○가 대표이사로, ○○○, ○○○이 각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 ○○○, ○○○은 원고를 투자자로 영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7. 11. 21.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의 보유 주식 중 합계 18,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양도주식 내용

1. 양도할 주식의 회사명 : 피고
2.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총 주식수 : 10,000원/30,000주
3. 양도할 주식의 수 : 18,000주
4. 1주당 양도금액 : 10,000원
5. 양도할 주식의 총금액 : 180,000,000원

(별첨 양해각서)

○ 피고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아래와 같은 권한, 책임, 의무를 이행한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건축 인·허가 및 PF 발생 이전에 필요한 제반경비(설계관련 비용, PF 발생전 필요한 예코티, 학교분담 계약금, 시행사 운영 등)를 책임지고 진행한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017. 11. 21. 원고가 18,000주, ○○○가 6,000주, ○○○와 ○○○이 각 3,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이어 원고, ○○○, ○○○, ○○○은 같은 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원고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서면결의

1)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관련 비용, 학교 증축 용역계약분담금, 인허가 관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2) 이에 ○○○, ○○○은 2018. 3.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별첨 양해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 ○○○, ○○○은 2018.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등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기한 주식 매수대금 1억 8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3) ○○○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2018. 5. 2.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전원(○○○, ○○○, ○○○)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4) 이어 ○○○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주주명부에 ○○○ 12,000주, ○○○와 이치훈 각 9,000주를 보유하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를 마쳤다.

5) ,○○○, ○○○은 같은 날 주주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며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 3, 4, 7~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서면결의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의 아버지인 ○○○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아 이사 과반수 출석이라는 성립요건도 미달된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주주명부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 ○○○, ○○○은 임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의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다. 그런데 ○○○, ○○○, ○○○은 원고를 주주의 지위에서 배제하는 허위의 2018. 5. 2.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위 명의개서절차는 대표이사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위와 같이 위법하고 위조된 허위의 주주명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실체상 하자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서면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1) 피고 정관 제33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 제1항은 "이사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에 이사 ○○○, ○○○, ○○○이 출석한 사실,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고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적법한 결의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여부)

1)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 ○○○, ○○○의 2018. 3. 2. 및 2018. 4. 25. 각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서면결의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1) 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 단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서면결의의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이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위 명의개서를 전제로 피고 주주 전원(○○○, ○○○, ○○○)의 동의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허준기

판사 정철희